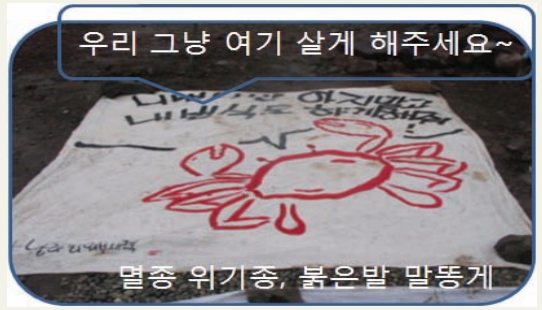


# 제주에 정의(Justice)를! 강정에 평화(Peace)를!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하며, 절대보전지역을 무단해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사강행은 강정과 제주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킵니다.  
해군과 도정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제주 4.3의 진실과 화해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의 정의, 강정의 평화가치를 위해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해군기지 사업 바로 알자! 5문 5답

## 첫째, 국가안보상 필요한가?

해군의 군사정책은 대양해군정책과 연안해군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양해군정책의 목표 :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능력 향상
- 연안해군정책의 목표 :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 도발 격퇴에 필요한 능력향상

해군기지건설사업은 대양해군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 '대양해군'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 둘째, 적정한 곳을 입지로 선정했는가?

강정 앞바다는?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 경관보전지구로 1등급
-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 강정 해안가는 길 약 800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름비바위'
- 해안 주변 토지 대부분이 역사 유물 산포지
-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뚝게의 대규모 서식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강정의 바다는 사라지게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6만여평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 소멸과 생태계의 절멸은 불가피합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선정된 강정의 바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말뚝게, 연산호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셋째, 입지선정과정은 민주적인가?

- 강정마을의 인구 1,900여명 중 80여명이 똑똑 해군기지 찬성, 과연 입지선정과정은 민주적이라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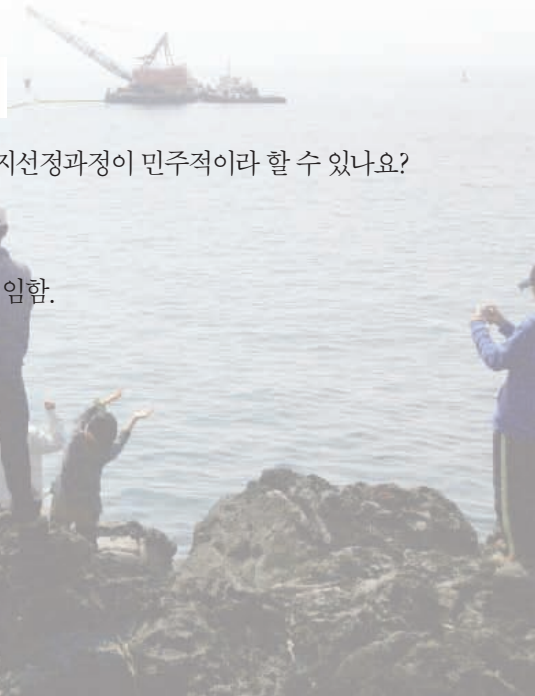
2007년 4월 26일, 강정 주민 80여명 모여 해군기지 유치결의

2007년 5월 14일, 도지사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 발표

2007년 8월 10일,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 주도한 마을이장 해임함.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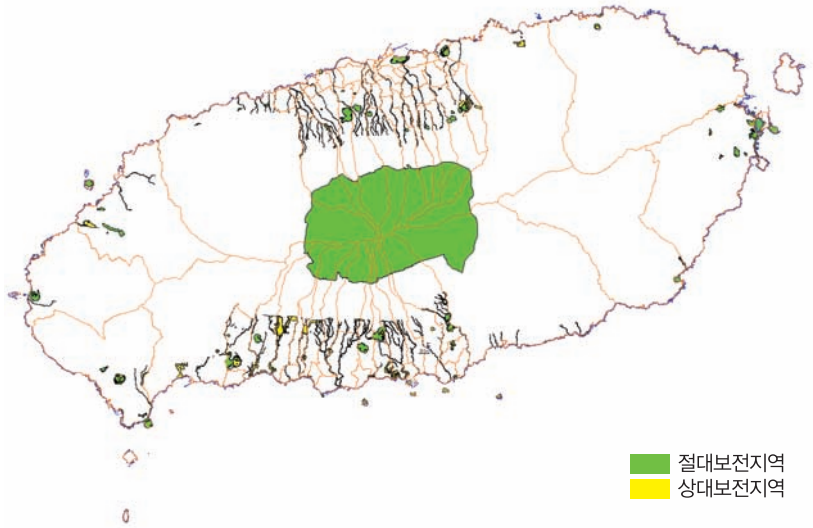
(강정주민 725명 참석, 반대 94%, 반대 680명)





## 넷째,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가?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자연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김태한 전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앞으로 한라산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 자연보전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정도에 해당합니다. 절대보전지역변경은 도지사만이 할 수 있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 다섯째,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한가?

제주에는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정마을회의 대도민호소문에 따르면, "해군은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와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입지를 선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들어오는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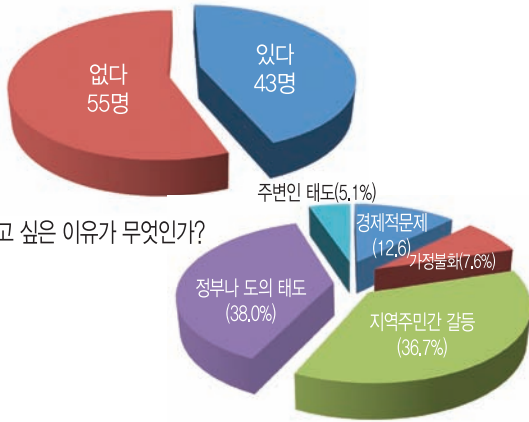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둘째, 적정한 곳을 입지로 선정해야 하며, 셋째,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넷째, 입지선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다섯째,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강정마을 문제에 외부인은 출입금지

## 해군기지 사업단 “외부세력 나가라!”

### 찬반으로 나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시키는 조정자는 누구?

◆ 최근 한달간 '죽고싶다' 생각한 적 있나?



◆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강정마을 주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증상	응답자	이상군	백분율
신체화장애	98	38명	38.8%
강박장애	98	49명	50.0%
대인관계민감성	98	44명	44.9%
우울	98	52명	53.1%
불안	98	50명	51.0%
적대	98	56명	57.0%
공포	98	17명	17.3%
편집증	98	37명	37.8%
신경증	98	17명	17.3%
한가지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98	74명	75.5%

옆의 표와 그래프는 서귀포신문에서 지난해 마을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정신심리설문(BSI)을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다. 전문의에 따르면 “보통 인구의 최대 20%정도가 우울증을 앓는 것과 비교할 때 죽고 싶다는 응답률이 무려 40%인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 강우일 주교, “무력 통한 공사 진행 절대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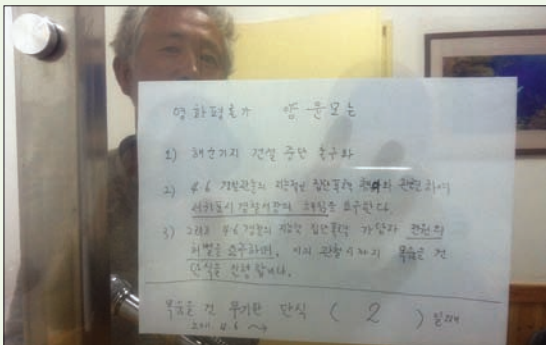
제주는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보물섬이고, 강정은 그 중에서도 바다가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바다에 무력만을 앞세운 해군기지 공사는 절대 안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무력은 결코 평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평화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얻을 수 있다. <제주투데이 2011.4.19>

### 신구범 전지사, “처음에는 찬성론자였는데”



“나는 원래 해군기지 찬성론자였다. 그런데 이곳에 온지 3일만에 반대론자가 됐다. 해군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협박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봤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안보를 빙자한 군 내부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위한 해군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다.” <제주의소리 인터뷰 내용>

### 양윤모 평론가 옥중 단식중 “공사 중단될 때까지 단식”



양윤모 평론가 지난 4월 6일 공사자재 반입을 막으려던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체포된 상태이다. 현재 4월 6일을 기점으로 하여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해왔다. 현재 다음아고라에서 폭행경찰에 대한 징계서명 및 양윤모씨에 대한 석방서명이 진행 중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148>)

### 해군기지사업단, “외부세력이 나가면 고소·고발 취하겠다”

야 5당이 해군에게 공사 관계업체들이 강정주민들과 활동가에 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해군기지사업단의 이은국 단장은 공사방해를 하는 사람은 강정주민보다 외부세력이 더 많다고 하면서 외부인들이 떠나면 취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고소, 고발된 사람들은 강정주민 두명과 활동가 두명으로 똑같다.

강정마을회의 강동균 회장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직접 현장까지 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위기의식을 느낀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해군의 목표는 강정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2011.4.28>